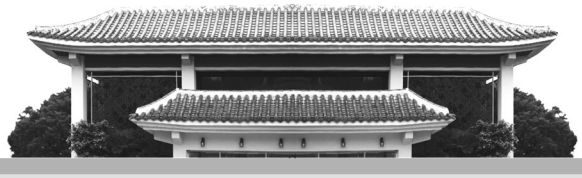
국제정세 변화가 북한의 경제 내구력에 미칠 영향

이 영 훈

동국대 DMZ평화센터장



Ⅰ. 북한 경제 변화의 새로운 변수, 국제질서 변화

북한의 경제사정은 대북제재, 코로나, 자연재해 등의 3중고로 인해 2017년 이후 가장 어려운 상태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 내부적으로도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 문제가 심각해진 2021년 4월에 노동당 세포비서 대회에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1]

그러나 코로나의 충격은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2022년 8월 10일 코로나 종식을 선포하고 정상방역체계로 전환했다.[2] 또한 4월에는 북한 국경 지역 세관들은 당국의 지시에 따라 교역 및 육로 통행 재개에 대비한 준비 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3] 한편 자연재해는 농업 등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대북제재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은 대북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자력갱생을 강화해 왔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UN의 대북제재를 준수했기 때문에, 대북제재 충격의 완화는 자력갱생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22년 5월 북한의 ICBM 발사 실험에 대한 UN안보리의 추가제재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UN의 대북제재에 균열이 생길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가 와해되는 하나의 모습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고는 국제질서 변화가 향후 대북제재와 북한의 경제 내구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 전망해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국제질서 변화가 북한 경제 변화의 주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1 "김정은 '고난의 행군 결심' … 전문가 '북한, 내부 통제 강화로 대미 교착 장기전 대비'," VOA, 2021.4.9.

2 조선중앙통신, 2022.8.13.

3 SPN 서울평양뉴스, 2023.4.22

제재가 주로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북한의 일차적인 대외협력 고려대상은 미국과 갈등하는 중국과 러시아다. 그런데 북·중 협력은 기존 협력이 복원되는 경향이 강하다면, 북·러 협력은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본고에서는 북·러 협력의 구조와 변화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기대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전쟁 중인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밝히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에 집중하고자 한다.

Ⅱ.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질서 변화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니다. 미국과 서방이 지원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국제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4] 그리고 이는 미중갈등이 심화되는 국면에서 전개되고 있어 국제질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전망하기 위해 먼저, 전쟁의 현황을 검토해보자.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원조를 통해 전쟁에서의 군사적 승리와 대러 경제제재를 통한 러시아 국내에서의 레짐 체인지를 설정했다.[5] 과연 이러한 우크라이나 승리의 조건은 실현되고 있는가?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된다.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승리의 조건을 충족하기에는 서방의 군사원조가 미흡하다. 병력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3배 이상이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역병 25만 명과

---

4 미국과 러시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간 '3층위 복합전'이다. 장세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원인, 경과, 전후 국제질서," (DMZ 포럼 2022 발표문, 2022.9.17.)

5 Barry R. Posen, "Ukraine's Implausible Theory of Victory: Fantasy of Russian Defeat and the Case of Diplomacy," *Foreign Affairs*, 8 July 2022, 이해영,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세계질서』, 사계절, 2023, p. 162.

징집병 45만 명을 합쳐 대략 75만 명이다. 반면 러시아군은 포병을 중심으로 파병한 직업군인 20만 명, 양대 분리 공화국의 민병대와 와그너그룹, 체첸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는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 이전보다 크게 늘었다. 이는 군수물자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가 절대적 열세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열세는 미국의 현대전 전술 오류와 탈산업화에 기인한다. 즉, 미국은 현대전에는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정밀 유도무기가 필요하며, 탄약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재래식무기의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대량의 탄약을 제조할 수 있는 산업기반과 설비가 취약하다고 평가된다. 이는 미국이 21세기 자신의 산업기반을 중국으로 이전했던 데 기인한다. 그 결과 미국은 유사시에 사용할 총알과 포탄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다른 서방국가들의 경우도 비슷하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탄약 지원이 요구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반면 러시아는 국방개혁을 통해 2002년 이후 15년 동안 새로운 전략무기를 개발하는 등 재무장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러시아는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일부 첨단무기에서 미국을 능가하고 있다. 하나의 예로 미사일의 경우, 미국과 러시아의 전력 차이는 그저 격차(gap)가 아니라 심연(abyss)이라 평가되기도 한다.[6]

둘째,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의 충격이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다. 경제제재는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 금지, △러시아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첨단기술과 관련 제품의 러시아 수출 통제, △달러결제망에서 퇴출 등으로, 러시아를 GVC(Global Value Chain)에서 배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7] 이에 대해 러시아는 중국, 인도, 튀르키에, 이란 등과의 경협을 확대함으로써 GVC 단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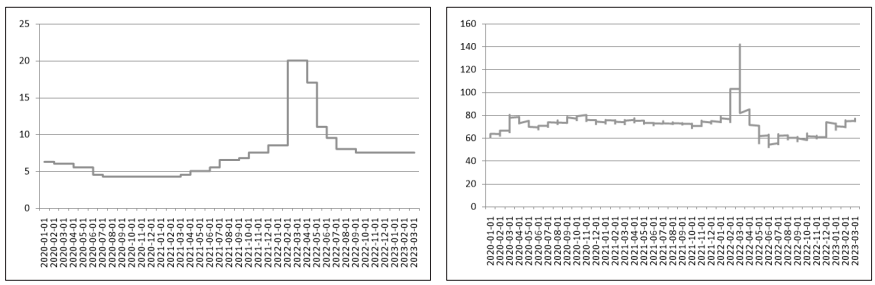
6 Andrei Martianov, Losing Military Supremacy: The Myopia of American Strategic Planning, Clarity Press, 2018, pp. 207~208, 이해영, 앞의 책, pp. 227~229

7 그 외 △러시아 정계와 군부 수뇌부, 대부호와 기업들에 대한 자산 압류 또는 동결, △제재 리스트 인물과 그 가족들의 비자 제한 등이 포함된다,

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에너지와 식량을 무기화하여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항구를 봉쇄하고, 달러 결제망 퇴출에 대해서는 루불화 결제로 맞대응하고 있다. 루블화 결제를 거부한 나라에 천연가스 공급을 끊는 등의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미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점령에 따른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수입대체 정책과 더불어 핵심 기술 개발, 외환보유고 증대, 중국과의 광범위한 협력 확대 등을 통해 경제내구력을 강화해 왔다.

그 결과 러시아 경제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파국을 낳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방은 러시아 경제가 국제금융망 차단, 산업생산과 교역 위축, 루블화 폭락 등 악재가 겹치며 1998년 금융위기 때와 맞먹는 경기 후퇴를 겪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8] 그러나 IMF는 2022년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을 -2.2%, 2023년 0.3%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 외 기준금리, 환율, 소비자물가 등의 지표들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러시아의 기준금리와 환율(2020.1~2023.3)



자료: IMF(https://www.imf.org/en/Data)

8 미국 CNBC 방송(2022.3.3.)은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를 인용해 최근 몇 주 동안 러시아 최상위 부자 20명이 국외 자산 압류와 금융 동결, 루블화 폭락으로 총자산의 3분의 1에 가까운 800억 달러(약 96조 6천억원)를 날렸다고 보도. 한편 미국 투자은행 제이피(JP)모건은 앞으로 수개월 동안 러시아 GDP가 11%가량 급감하면서 1998년 금융위기 때와 맞먹는 경기 후퇴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의 내용이 시사하는 바는, 우크라이나가 대규모의 추가 지원을 받지 않고는 승리하기 어렵고, 이러한 추가지원은 전쟁을 장기화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란 점이다. 그리고 이는 당초 서방의 예상 및 우리가 접하는 일반적 언론 보도의 내용과 크게 다르다.[9]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분수령으로 미국은 과거 미소 냉전보다도 더 벅찬 중러 블록을 상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러시아는 경제제재에 직면하여 중국과의 협력이 절실하고, 중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정치군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원자재와 군수물자를 러시아로부터 저가로 확보하는 한편 양자대결 구도보다는 다자주의를 통해 대미 갈등의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 미·중 간 무역, 기술 및 금융 부문에서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고,[10] 대만을 둘러싼 갈등의 심화는 군사 전쟁 가능성마저 잠재하고 있다. 이처럼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국면에서 미국의 대러 제재 강화는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도록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11] 브레진스키가 경고한 바 있

---

9 미국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2월 초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에 필요한 병력과 탄약, 장비를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러시아군이 대규모 참호를 건설하고 방어선을 구축했기 때문에 반격 작전이 큰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의회에 제출한 다른 보고서에도 올봄 반격이 지난해 가을 반격과 같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담겼다.(YTN, 2023.4.12.)

10 2018년 중국산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의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중국도 무역 부문에서는 관세부과와 공급망 경쟁으로, 기술 부문에서는 첨단기술의 주도권 경쟁으로, 금융 부문에서는 자본접근성 및 결제망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의 예로 결제망 경쟁을 보면, 중국은 이미 제재를 받는 러시아에 이어, 패트로 달러 체계를 구축했던 사우디아라비아, 남미 최대 교역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등으로 위안화 결제망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11 귀화한 러시아계 미국인인 안드레이 마르티아노프는 미국의 대러 압박 정책을 '21세기 전략적 아둔함'이라 맹비난하고 있다. "21세기의 전략적 아둔함이라고밖에 묘사할 길이 없다. 미국은 러시아와 동맹을 맺을 역사적 기회를 놓쳤다. ... 1990년대부터 미국은 ... 러시아를 압박하는 치명적 원죄를 저질렀다. 즉,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도록 압박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에 모든 경제수단을 제공해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었다. 오늘날 미국은 핵과 산업부문에서 초강국 두 나라를 상대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단순히 경제동맹을 넘어 군사적 정치적 동맹으로 공식화된다면, ... 미국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 될 것이다"(Andrei Martianov, *Losing Military Supremacy*, 2018)

는 위험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아마도 이란이 합세한 거대한 동맹이다."[12]

Ⅲ. 향후 북·러 협력의 구조 및 기대효과[13]

협력은 서로의 필요(needs)가 충족될 수 있을 때 지속가능하다. 그렇다면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수요는 무엇이며, 제재국면에서 협력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기로 하자.

우선, 양국의 수요를 검토해 보자. 러시아는 북한의 군수물자와 인력(군사 및 건설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 구체적으로 러시아는 북한의 107-mm 다중발사로켓, Spike-NLOS 유사체 등의 로켓과 포탄 등에 대한 수요를 밝힌 바 있다.[14] 또한 북한의 의용군 부대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파견될 것이라 보도한 바 있다.[15] 그리고 건설 부문의 지원으로, 도네츠크 공화국, 루한스크 공화국 등의 재건사업에 북한의 참여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러시아의 원자재 및 과학기술에 대한 수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 이후 본격화된 대북제재[16]의 충격이 가장 큰 영역은 국산화가 어려

---

12 브레진스키, 『거대한 체스판』, 2017.

13 이영훈, 최장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향후 북한 경제 내구력에 미칠 영향과 한반도 정세에 주는 시사점," 『북한학연구』, 18권 2호, 2022.12. 참조

14 "Ответ HIMARS: КНДР может передать ДНР и ЛНР уникальное оружие," (2022.8.4.), News.ru. 미국 백악관은 2022년 1월 20일 러시아 와그너 그룹이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였다고 증거사진을 제시하였다.

15 '루스카야 베스나'(러시아의 봄), 2023.3.30. 연합뉴스, 2023.3.30.

16 현행 대북제재는 △무기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품목 수출제한, △유류 공급제한(원유 연간 400만 배럴(기존 수준 동결), 정유제품 50만 배럴(기존 공급량의 90% 차단),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각종 금속류 대북수출 차단, △해외 파견노동자 송환, △북한의 주요 수출품(무연탄 및 광물, 의류, 수산물 등) 수출금지, △대북 경협 금지, △해상 검색·차단 강화 등이다.

운 에너지, 설비/부품 등의 원자재의 조달과 자체 혁신이 어려운 기술개발이라 할 수 있다.[17] 그런데 러시아는 이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풍부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 의존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2020년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세계 3위(12.1%), 매장량은 세계 6위(6.2%)이다. 전체 수출에서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약 30%를 차지한다. 또한 북한의 산업 설비는 과거 대부분 구소련의 지원으로 설치되어 여전히 작동 중이며, 현재 공장 현대화 등 개보수 수요가 높은 실정이다. 현재 러시아 중공업 공장에서는 이러한 장비가 생산되고 있어,[18] 북한의 공장 현대화에 필요한 예비 부품 및 장치를 제공해줄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전통적인 우주·항공 과학기술 분야의 강자이다. 이는 우주개발뿐 아니라 무기 개발 및 일부 산업에서도 활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협력의 실현 가능성도 높다. 러시아는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고, 보복조치로 맞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북·러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러시아는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개연성이 클 것이다. 이러한 점은 서방과의 관계악화를 원하지 않는 중국의 대북제재 결의안 준수 기조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향후 북·러 협력 확대는 대북제재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러시아로부터의 석유, 기계·설비, 운송수단, 비료 등의 도입은 북한의 공장 정상화 및 식량증산에 기여함으로써 경제내구력을 높일 것이다. 또한 러시아의

---

17 이영훈,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하의 북한 기업소의 경영활동 분석: M. Porter의 value chain 모형 적용," 『현대북한연구』, 25권 2호 (2022) p. 175. 자금조달의 제약은 1988년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데 따른 금융제재의 결과로, 2017년 이후 본격화된 제재의 영향과는 거리가 있다.

18 "≪Северокорейцы не выставляют нам счета после кажд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в ООН≫ Посол РФ в КНДР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 о мотивации Пхеньяна в признании ДНР и ЛНР," (2022.7.18.), Известия. 〈https://iz.ru/1365120/nataliia-portiakova/severokoreitcy-ne-vystavliaiut-nam-scheta-posle-kazhdogo-golosovaniia-v-oon〉 (검색일: 2023.2.25.)

항공·우주(인공위성, 미사일)를 비롯한 첨단산업 과학기술 분야의 기술을 도입은 정체된 북한의 과학기술 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북·러 경협이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다. 현재 북·러 경협의 규모는 북한 무역의 5% 미만이고, 경협에 필요한 철도, 도로, 항만 등 인프라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Ⅳ. 북한의 대외협력 확대 및 시사점

국제정세의 변화는 북한의 대외협력 확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벌써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최근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 불과 4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건수와 맞먹는 불법 환적 사례가 포착되었다. 올해 들어 이날까지 관측된 북한의 불법 환적 사례는 모두 36건으로, 지난해 한해 동안 포착된 건수와 동일하다.[19]

둘째, 공식적인 북한의 대외무역도 본격적으로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최근 접경지역 세관에 교역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문을 내렸다. 그에 따라 양강도 혜산, 자강도 만포, 함경남도 회령, 함경북도 온성 등 지방 세관들이 육로 통행 재개에 대비한 준비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0] 또한 북·중 간 최대 인적 교류 통로인 조중(북중)우의교를 지나는 신의주-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간 도로 완전 개통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로가 개통되면, 화물트럭과 여객 버스 운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21] 교역재재 움직임은 일차적으로 코로나 충격의 완화에 따른 것이지만, 국제정세의 변화는

19 "북한 불법 환적 급증…올 들어 4개월 만에 작년치 수준 도달," SPN 서울평양뉴스(http://www.spnews.co.kr), 2023.4.24.

20 "북한, 북중 육로 통행 재개 움직임…교역 준비 지시문," SPN 서울평양뉴스, 2023.4.23.

21 "신의주-단둥 간 도로 완전 개통되나…차량 운행 정상화 '촉각'", Daily NK, 2023.4.26.

이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북한의 경협 확대 조짐은 향후 대북제재의 균열과 북한의 경제 내구력 강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후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도 대만문제 등으로 미국과 갈등이 심해지면, 기존의 대북제재 준수 기조를 폐기할 수도 있다. 여기에 최근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대만문제 거론 등 적대적인 對러, 對중 정책은, 러시아와 중국의 보복조치로 대북지원 강화(즉 대북제재 약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는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북한의 경제 내구력 강화를 낳음으로써, 북한의 핵보유국화의 길을 열어주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